

# 주요국 주택구입지원 정책 동향 분석

고 제 현(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연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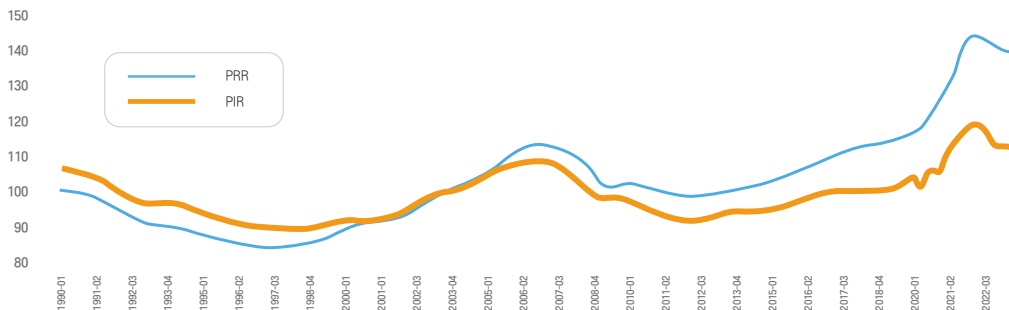
- ▶ 전례 없는 주택구입 부담 완화가 글로벌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 등 국가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 지원 정책들이 시도되고 있음
- ▶ 우리나라도 주택구입 부담 증가로 인한 신규진입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큰 바 해외 정책 동향을 살펴봄

## 1. 논의배경 : ‘전례 없는 주택구입 부담’ 완화는 글로벌 정책 과제

### ●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 여파로 주택가격이 다소 조정되었지만 OECD 국가들 주택구입 부담은 전례 없는 수준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 속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었고, 팬데믹 대응 여파로 다수 국가들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함
- OECD 국가들의 표준화된 주택가격 대비 소득 비율(Price to income) 및 주택가격대비 임대료 비율(Price to rent Ratio) 장기 추이를 보면, 2000년대 중반 고점을 찍고 감소세를 보이다 2014년 이후 지속적 상승세

OECD 국가들 표준화된 주택가격지표들 추이(1990Q1-2023Q3)



※ 자료: OECD Analytical House Price Database

## 주택가격과 소득의 괴리는 특히 신규 주택구입 시장에 진입하려는 가구에 큰 부담으로 작용. 이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지원 정책이 부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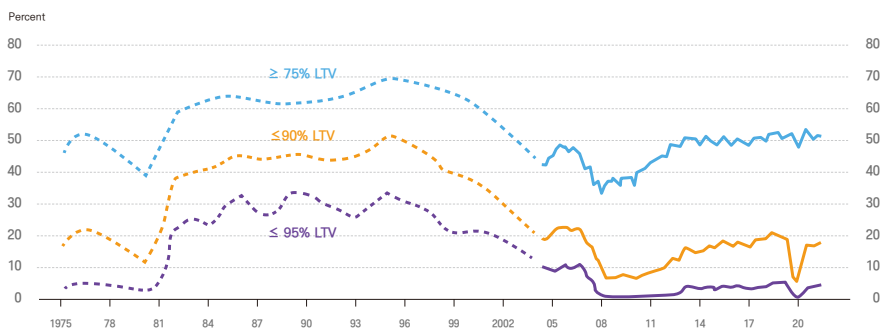
- 주택보유 여부와 자산 불평등 간에 강한 역의 상관관계가 강조(Causa et al, 2019)되며, 주택 구입시기가 지연될수록 자산과 소득의 괴리가 확대되고 자산 불평등 확대 부작용 우려
  - OECD 대부분 국가에서 가계자산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주택가격이 소비 및 투자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및 노동이동성·교육·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였다 평가(OECD, 2019)
- 특히 자가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가구의 자가점유율 감소폭이 두드러짐에 따라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며, 청년가구 혹은 저자산 가구를 포괄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구입 기회 보장이 중요한 정책 아젠다로 부상함

## 2.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정책 프레임 변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더라도 1980년대 이후 미국 및 유럽 다수 국가가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주요 정책대상이었음

- 특히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자가소유 촉진 정책을 선택한 국가들은 모기지 팽창 및 규제 완화 기조하에 주택구입시 5~10%의 자기자본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선택지를 정책적으로 제공하거나 민간 모기지 시장에서 허용하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구입 기회 가능성을 높임(Chiuri et al. 2003)
  - 영국의 신규 모기지 대출 중 LTV 분포를 살펴보면, LTV 90%을 초과하는 모기지 비중이 1980~1990년대 40~50%에 달함. 95%을 초과하는 모기지 비중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30%에 달함

영국 신규 대출 중 高 LTV 수준별 비중



※ 자료: Bank of England 재인용, Building Society Mortgage survey, Product sales data base, Survey of Mortgage Lenders, 영란은행 계산

- 미국의 LTV 80% 초과 모기지의 경우 모기지보험 가입 의무를 전제로 모기지보험료를 부담하는 한편 적은 자기자본으로도 주택구입이 가능함
  - 모기지보험은 연방주택청(FHA), 재향군인청(VA) 등이 대출 100%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공적 모기지보험(Mortgage Insurance)과 LTV 80% 초과분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민간 모기지보험(Private Mortgage Insurance)으로 이원화됨

## ● 호주와 캐나다의 경우 명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는 주택구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옴

- 호주는 2000년 7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일회지급제도(First Home Owner Grant)를 도입, 주요 주택수요유인 정책수단으로 보조금을 조정하며 운용
  - 연방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이나 주별 예산에 따라 자격기준 및 지급액에 차이가 있음
- 캐나다의 경우 1992년 First time Home Buyers Plans을 도입하여 인출한도를 조정하며 주택구입 지원 정책으로 운용 중에 있음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의 경우 은퇴저축(RRSP)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여 주택구입 자금으로 활용하고 15년간에 걸쳐 인출금액을 재불입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부채부담을 통한 주택 보유 방식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증가했고, 기존 주택수요 지원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요자 지원 중심 자가보유율 촉진 정책의 부작용이 강조(Andrews 외, 2011)되었고, 주택시장을 연계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가 강조되며 다수 국가에서 高 LTV 모기지 비중이 현격히 감소함
- 하지만 주택경기가 회복되고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주택구입 부담뿐 아니라 임대료 부담이 높아져 주택구입 지원 필요성이 증대
  - 최근 주택구입 지원 정책은 정책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한정하는 경향이 나타남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저자산 가구들이 모기지를 이용함에도 부족한 자본을 어떻게 충당해 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짐

### 3. 주요국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정책 검토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회복되며 주택가격 급등세 경험 후 도입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정책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함

##### ■ 본 연구에서는 정책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여 주택구입 지원 정책을 살펴봄

- (정책유형1) 주택구입 자금 목적 저축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은퇴 후 인출가능한 연금저축의 주택구입 목적 일시 인출을 허용하는 방식의 주택구입 자금 형성지원 정책
- (정책유형2) 일회성 주택구입 자금 보조금 지급
- (정책유형3) 금융기관 허용 LTV 초과 대출분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 (정책유형4) 금융기관 모기지 이용과 동시에 주택가격의 10~40%의 지분을 정부와 공유하는 정부 대출 제공

#### (1) 주택구입 자금 형성지원 정책

#### ● 주택구입자금 형성지원 정책은 가계 저축률 제고와 연계되어 진행됨. 저축액에 비례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저축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한 간접적 지원 방식이 존재함

- 이에 국가별 정책적 지원 저축제도 혹은 의무적 저축제도와 연계되어서 정책이 설계됨
- 다른 주택구입 지원에 비하여 간접적이며 장기간 참여 시 혜택이 증가함. 또한 정책 대상자의 저축역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행 국가들에 있어서도 그 참여가 제한적인 한계 존재

#### ① 영국 [Help to buy: ISA]

#### ● (2015.12~2019.1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 구입자금 형성지원 목적으로 이자 비과세 및 납입액의 25%를 지원하는 저축 보조금 제도

- 기존 비과세 저축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확장형의 하나로 한시적으로 운영됨
  - 예·적금 상품위주의 예금형 ISA의 연장선에서 이자 및 정부지급 보조금에 대하여 비과세, ISA 연간 납입한도액(£20,000)이 소진됨
- 현재 영국 ISA는 예금형(Cash) ISA, 투자형(Stock and Shares) ISA, Lifetime ISA, 혁신금융(Innovative Financial) ISA 존재

- (정책대상) 18~40세,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개인 대상
  - 개인 단위 가입이므로, 각각 가입한 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 시 부부 모두 보조금 수령 가능
- (운영방식) 가입자는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ies) ISA 계좌 개설, 매월 최대 £200(약 35만 원<sup>1)</sup>) 적립 가능, 최대 보조금 지급액은 £3,000(약 525만 원)
  - 2029년 11월까지 ISA 납입 가능, 2030년 11월까지 25% 보너스 청구 가능
  - 최초 계좌 개설 시 £1,000 입금 가능, 총 입금액 최대 £12,000에 대하여 £3,000 지급
- (보조금 지급 조건) 실거주목적 £250,000(런던은£450,000) 이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보조금 지급
  - 중도해지 또는 수령조건 미충족 시 정부보조금은 반납, 단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유지됨

## ② 호주 [FHSS: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 🌸 (2017.7~)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Superannuation)과 연계하여 자발적 기여금 납입 및 적립금 인출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제공

- 호주 퇴직연금은 2층 의무가입방식(compulsory Superannuation)과 3층 자발적 개인연금방식(Voluntary Superannuation)으로 구성됨
  - 3층 자발적 개인연금은 세전소득이나 세후 소득을 활용하여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전기여금과 세후기여금으로 구성됨

〈호주 자발적 퇴직연금 납입 유형별 특징〉

구분		연간납입한도	비고
세전기여금(Concessional /Salary Sacrifice)		\$27,500	세전급여 일부를 퇴직연금계좌로 지불, 세율 15% 부과
세후 기여금	Non-Concessional Contribution	\$110,000	이미 소득을 부과했으므로 추가세금 미부여
	배우자 기여금		- 소득이 낮은(연소득 \$40,000 미만) 배우자 계좌에 납입 - 연간 소득공제 최대 \$540(납입금액의 18%)

※ 자료: Australian Government/Australian Taxation Office

1) £1, 1750 환율 적용

- (정책대상) 18세 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이전 부동산(토지, 상업용 부동산 포함) 소유 이력이 없고, 거주목적 주택구입자에 한함
  - 단, 예외적 사유(파산, 이혼, 실업, 질병, 자연재해 등)로 부동산 소유권 상실 시 허용, 주택구입 후 1년 중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운영방식) 가입자는 세전기여금 혹은 세후기여금 형태의 자발적 퇴직연금에 연간 \$15,000 납입 허용, 최대인출 개인별 \$50,000(부부합산 \$100,000) 허용
  - 가입자가 세전기여금 방식으로 납입 시 소득세율 34.5%(의료세 2% 포함)보다 낮은 15% 세율을 적용받음
  - 예를 들어, \$15,000 Super 계좌 납입 시 세율은 15%로, 세액을 공제한 기여금은 \$12,750임. 한편 일반 저축계좌에 납입 시 34.5% 세액을 공제하므로 납입금액은 9,825로 최대 세제혜택 차이는 \$2,925(약, 410만 원)임
  - 2018년 1월 이후, FHSS Scheme에 해당하는 납입금액 및 운용수익 인출 허용
  - 인출금액의 30% 소득공제, 그 외 인출금액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구간별 한계 소득세율 적용

### ③ 캐나다 [FHSA: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 🌸 (2023.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비과세 주택저축 계좌 지원 정책이 시행됨

- (정책대상) 18세~71세 캐나다 거주자, 최근 4년 이상 무주택자
- (운영방식) 동계좌 저축은 이자소득세 미부과 및 최초 주택구입 목적으로 인출 시 인출금액 전액 비과세
  - 연간 \$8,000 이내 5년간 최고 \$40,000까지 납입 가능
  - 주택구입금(Downpayment) 및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 가능, 인출 후 주택 미구입 시 세금 부과
  - 계좌 개설시한은 15년, 주택 미구입 후 계좌 종료 시 연금계좌(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로 이관 가능

## (2) 구입자금 보조금 지원 정책

● 주택구입에 보조금 지원 정책은 가장 직접적인 지원 정책이나 일반적인 주택구입 지원 방식은 아님. 최근 미국과 독일의 구입자금 보조금 지급 정책도 주택구입 자체보다는 대상자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 짐

■ 주택구입 지원 정책에 있어 보조금 지원 정책이 지양되는 이유는 정부지원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구는 저소득층보다는 상위소득계층으로 정책대상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임

■ 독일의 경우 저출산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미성년 자녀 보유 가구의 주택구입 지원, 미국의 경우 인종별 주택보유율 차이에 주목하여 생애 최초가 아닌, 세대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 정책 시행 예정

### ① 독일: Baukindergeld

● (2018.7~2022.12) 미성년 자녀를 가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 대상 주택구입 지원 및 건축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정책대상) 18세 이하 자녀를 보유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혹은 건축 가구

- (적격요건) 2018년 1월 1일~2021년 3월 31일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혹은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소득요건) 연 최대수입이 €90,000 이하 가구(단,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수혜 대상 수입 가능 소득은 자녀당 €15,000씩 상향)

■ (운영방식)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200(약 180만 원)를 10년 동안 지급

- 독일 KfW개발은행을 통해 프로그램(KfW424) 운용

### ② 미국: Down payment Toward Equity Act

● (2024~) 미국의 경우 세대 기준 최초 주택구입자(First-generation homebuyers) 대상 주택구입 지원법안을 입안 중에 있어 2024년 예산에 배정됨

■ (정책대상) 세대 기준 최근 3년간 주택 미소유, 중·저소득층 대상

- (소득요건) 구입할 주택의 지역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180% 이하

- (적격요건) 승인된 모기지 대출(적격대출, FHA, VA 모기지 등), 1-4세대 주택

- (사전요건) 주택구입자는 대출 신청에 앞서 HUD 인정 승인된 기관에서 주택 상담을 완료해야 함

- (운영방식) 지원 자격을 갖춘 주택구입자는 \$20,000(약2,800만 원)를 받게 되며,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주택구입자는 추가로 \$5,000를 지원받아 \$25,000(약3,500만 원)를 지원받음

### (3) 공적보증 및 직접대출

#### 🔴 주택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공적보증 및 정부 기금을 통한 대출제공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주택구입 지원 정책임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 도입된 공적보증 정책은 고 LTV 모기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아닌 정부 공적보증으로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구입의 기회를 확대하려는 시도
  - 영국의 경우 2013년~2017년, 한시적으로 LTV 80% 초과 분에 한해 정부 지급보증 정책을 시행. (Help to buy: Mortgage guarantee) 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정하지 않고 1주택자로 대상을 확대함
  - Covid-19이후 2021.4~2025.6까지 정책을 연장함

#### ① 호주: First Home Guarantee Scheme

#### 🔴 (2020.1~)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중 자기자본 5% 이상~20% 미만 보유 시 금융기관 모기지보험을 대체하여 공적보증 제공

- LTV 80% 초과 모기지 이용 시, 금융기관 모기지보험(Lender Mortgage Insurance)을 가입해야 함
- (정책대상) 18세 이상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로 생애 최초 거주목적 주택구입자
  - (소득요건)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125,000·부부합산 연소득 \$200,000 이하
  - (적격요건) 만기 30년 미만 원금상환 모기지 이용, 지역별 주택가격 상한 존재
  - (예외요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니더라도 10년 이상 무주택자
- (운영방식) 연간 10,0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허용, 2023년 이후 연간 35,000명 대상 확대 운영
  - 공적보증에 대한 비용은 없음



## ② 독일: WEF(Wohneigentum für Familien)

### ● (2023.6~) 미성년자 자녀 보유가구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시 보조금 지급제도를 저리 공적 대출의 공급으로 대체

- 국영개발은행(KfW)은 35년 만기 대출 실행 시, 10년 동안 1.25% 고정금리 대출 제공
- (정책대상) 18세 이하 자녀 보유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혹은 건축 가구
  - (소득요건) 연 최대수입이 €60,000 이하 가구(단,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수혜 대상 수입 가능 소득은 자녀당 €10,000씩 상향)
  - (적격요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공동 소유인 경우 50% 이상 지분 소유
    - 단, 이전 Baukindergeld 신청가구는 제외, 신청 이전 태어난 자녀만 포함

## (4) 지분공유대출

### ● 지자체 혹은 비영리단체 등과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 정책은 오랜 역사가 있음. 단, 최근 지분공유대출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적

- 가장 선도적으로 중앙정부 주도의 지분공유 대출 정책을 시행한 국가는 영국임. 2013년 이후 약 10년간 주택가격의 5~20% 지분을 공유하는 정부대출 프로그램 시행(Help to buy: Equity Loans)
  - 단, 영국 정책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신규건축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수요 지원과 더불어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함

## ① 아일랜드: First home Scheme

### ● (2022.7~202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혹은 건축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0% 지분공유 정부 대출 프로그램 시행

- (정책대상) 18세 이상 아일랜드 거주자
  - (적격요건)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정부가 인정한 대출기관에서 모기지 대출 실행
    - 단, 예외적 사유(이혼, 별거 및 개인 파산 등)로 소유권 상실 시 허용
    - 모기지 대출 한도 LTI(Loan To Income ratio) 4% 이하, 자기자본 10% 이상
    - 지역별 구입가능 주택가격 상한 존재

- (운영방식) 처음 5년간은 무비용, 단 6년 이상 경과 시 지분 매입이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비스 비용 지불
  - 6~15년은 1.75%, 16~29년 2.15%, 30년 이상 2.85%
  - 추가구입 주택지분 최소 비율(주택가격 시장가치에 비례)은 5%이며, 1년 단위 2번 이내 분할 지분 매입 가능

## ② 호주: Help to buy Scheme

### 🔴 (2024~)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이 거주목적 주택구입 시 최대 40%까지 지분공유하는 연방정부 차원의 정책 시행

- (정책대상) 18세 이상 무주택자로 신청이전 부동산(토지, 상업용 부동산 포함) 소유 이력이 없고, 거주목적 주택구입자에 한함
  - (소득요건) 단독가구 기준 연소득 \$90,000, 부부합산 연소득 \$120,000 미만
  - (적격요건) 최소 2년 이상 실거주목적, 호주나 외국에 부동산 소유가 없어야 함, 최소 2% 이상 자기자본 보유
    - 구입가능 주택가격 상한 지역별로 존재(\$55,000~\$95,000)
- (운영방식) 신축 주택 구입 시 40%, 기존 주택 구입시 30%까지 지분공유
  - 연간 10,000명 대상 4년에 걸쳐 운용 예정
  - 지분 공유에 대한 비용은 없으며, 최소 지분 5% 이내에서 추가 매입 가능, 모기지 만기 종료 시 혹은 주택 매각 시 정부 지분 상환

## ③ 캐나다: First Home buyer incentive

### 🔴 (2019~2024.3)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 대상 주택지분의 10%까지 정부와 지분공유하는 정책 시행

- (정책대상)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 (소득요건) \$12,000 이하(단, 토론토, 밴쿠버의 경우 \$150,000 이하)
  - 최근 4년간 주택 보유 이력이 없는 가구
  - 모기지대출과 정부 지분대출의 합이 LTI(Loan To Income ratio) 4.5% 이하, 혹은 \$722,000 이하

- (운영방식) 기존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의 5%, 신축주택 구입 시 5~10% 지분공유
  - 무이자, 단 모기지 만기 25년 도래 시 시장가격 비례 지분 상환
  - 단, 정부지분은 패널티 없이 상시 매입 가능

## 4. 결론 및 시사점

### ● 소득증가와 괴리된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신규 주택구입자의 시장진입 가능성이 악화됨을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함

- 주택구입물량지수(K-HOI)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대출을 활용해서 구입가능한 서울 아파트의 비중은 26.4%였으나, 2023년 기준 6.4%에 그침
- 한편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한국에서도 2001년부터 존재
  - 2001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대출을 한시적으로 운용함
  - 현재도 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보금자리론 등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운용 중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규 도입된 주요 국가별 주택구입 지원 정책은 장기간 국가별 주택정책 기조 및 고유의 주택금융 환경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함

- 영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분공유형 자가소유 모델을 주택구입 지원 정책의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였고(진미윤·김수현, 2017), 호주의 경우 1963년 이후 보조금 지급 방식의 주택구입 지원 정책을 시행해 옴
- 미국 및 유럽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고 LTV 모기지 대출 공급을 통한 주택구입 선택지 확장에 관대한 입장

### ● 우리나라도 주택구입 부담 증가로 인한 수요지원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음. 다양한 주택구입 지원 정책에 대하여 검토하였지만 역설적으로 그 정책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 주택수요 지원 정책이 갖는 가장 큰 내재적 한계는 정책적 지원으로 인한 수요 증가가 경직적 주택공급 환경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해 주택구입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임
  - 최근 생애 최초 주택구입 지원 정책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운용 목표를 시행기간, 소요예산 등을 한정하여 설정했다는 점이 특징임

-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금융 환경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의 정책적 시도를 모방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채 부작용 야기 우려
  - 우리나라는 장기간 큰 조정없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 추세로 수요지원 주택 정책에 다소 보수적이었다는 평가(진미윤, 2014, 이석희·임재만, 2019)
  - 주택수요 지원 정책 강화 시 정책 대상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정책 목표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참고문헌

- 외교부(2019.08.09), OECD 주택정책 수평적 사업 논의 동향
- 이석희, 임재만(2019), 서민의 자가소유 촉진을 위한 공적 주택금융 개선 방안, 부동산학회연구 제25집 제3호, 2019.9. pp.39~57
- 정원석, 마지혜(2017) 영국의 개인저축계좌 다변화와 시사점, KIRI 리포트 2017.4.3.
- 진미윤(2014), 한국의 자가 소유 부문의 미래,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 진미윤, 김수현(2017), 꿈의 주택 정책을 찾아서, 글로벌 주택시장 트렌드와 한국의 미래
- 최경진(2021), 호주 사례를 통해 본 주택구입과 노후소득의 조화 및 연계, 2021 주택금융리서치, 한국주택금융공사
- Australian Government(2023.7), Home Guarantee Scheme First Home Guarantee Fact Sheet 2023/24
- Australian Government, First Home Super Saver Scheme Key Fact Shee35
- Baukindergeld Nachfolger 2023 ean50.de/allgemein/baukindergeld-nachfolger
- Gov.ie <https://www.gov.ie/service/982d6-first-home-scheme>
- Government of Canada, The Home Buyers' Plan
- Hal Pawson, Chris Martin, Jilie Lawson, Stephen Whelan, Fatemh Aminpour(2022), Assisting first homebuyers: an international policy review, Final report no.381 AHURI
- 박은철, 김수경(2022),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 정책의 체계화 방향,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342호 2022.2.21
- HM Treasury: The Mortgage guarantee scheme
- National Housing starategy, First-time Home Buyer Incentive
- Orsetta Causa, Nicolas Woloszko and David Leite, 2019, Housing, wealth accumulation and wealth distribution: Evidence and stylized facts, OECD
- U.S. House Committee on Financial services-Ranking member maximine Waters-Fact Sheet: The Downpayment Toward Equity Act of 2023